

증시 동향

● 유통시장 ●

▣ 유가증권시장

2월의 유가증권시장은 월초 코스피지수가 1,360.23P에서 출발하여, 전일대비 57.11P(4.20%) 상승한 1,417.34P로 2월의 증시를 마감하였다.

이처럼 2월의 유가증권시장의 코스피지수가 강한 상승세를 나타낸 것은 미국 증시의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가 사상 최고치 행진과 해외 증시의 동반 상승세 및 북핵 6자 회담 타결 등에 따른 상승 기대심리 확산 등의 영향으로 투자심리가 회복된 때문으로 풀이 된다.

2월중 동향을 자세히 살펴보면 2월 1일, 전일 미국 증시가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진정 기미를 보이며 경기회복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경기진단에 따른 큰 폭 상승 소식에 힘입어 전일대비 무려 22.67P 상승한 1,382.90P로 출발하였다. 2일에도 전일 미국 증시의 상승 행진과 국내 기업실적 호전 기대감 등으로 투자심리가 호전된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의 대량 매수 유입에 힘입어 전일대비 무려 30.24P 상승한 1,413.14P로 1,410P선을 단숨에 회복하였다. 5일에도 전주에 이어 외국인 투자자의 매수 행진에 힘입어 전주말 대비 4.81P 상승한 1,417.95P로 사흘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6일에는 단기 급등에 따른 부담감으로 등락을 거듭하다가 외국인 투자자의 매수에 힘입어 전일대비 10.63P 상승한 1,428.58P로 나흘째 상승세를 보이며 1,420P선을 단숨에 회복하였다. 그러나, 7일에는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매물과 옵션만기일 및 금융통화위원회의 콜금리 결정 등을 앞두고 부담감을 보이며 전일대비 2.29P 소폭 하락한 1,426.29P로 닷새만에 조정양상을 보였다. 8일에도 전일에 이어 단기 급등에 대한 부담과 외국인 투자자의 차익매물 출회로 전일대비 2.71P 소폭 하락한 1,423.58P로 이틀째 하락세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9일에는 외국인 투자자의 경계 및 차익매물을 프로그램 매수로 거뜬히 소화하면서 전일대비 4.10P 상승한 1,427.68P로 하

루만에 상승 전환하였다.

2월 12일, 최근 단기 급등 부담과 미국 금리인상 부각에 따른 미국 증시의 큰 폭 하락 소식의 영향으로 전주말 대비 13.39P 하락한 1,414.29P로 장을 마감하였다. 그러나, 13일에는 북핵 6자 회담타결 소식에 따른 투자심리 호전과 프로그램 매수 유입에 힘입어 전일대비 4.15P 상승한 1,418.44P로 하루만에 상승 전환하였다. 14일에는 미국 증시를 비롯한 글로벌 증시의 반등과 북핵 6자 회담 타결로 상승 기대감에 힘입어 전일대비 17.66P 상승한 1,436.10P로 1,440P선 돌파를 앞 두고 장을 마감하였다. 15일에도 전일 이어 미국 증시의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가 또 다시 사상 최고치 기록경신 행진에 따른 미국발 호재 등의 영향으로 전일대비 7.53P 상승한 1,443.63P로 사흘째 상승세를 시현하였다. 16일에는 전일에 이어 미국 증시가 또 다시 사상 최고치 기록 경신에도 불구하고 연일 상승에 따른 차익매물 출회로 장중 내내 등락을 거듭하는 혼조세를 보이다가 장 막판 외국인 투자자의 매수에 힘입어 전일대비 5.18P 상승한 1,448.81P로 1,450P선에 바짝 다가섰다. 20일에는 지난 주말에 이어 외국인 투자자의 매수 행진에 힘입어 전주말 대비 4.15P 상승한 1,452.96P로 1,450P선을 회복하며 닷새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2월 21일, 일본 금리인상에 대한 경계심리와 코스피지수의 사상 최고치 근접에 따른 경계심리 작용으로 장중 내내 등락을 거듭하다가 전일대비 1.58P 소폭 하락하였다. 그러나, 22일에는 기관투자자와 프로그램 매수 유입에 힘입어 전일대비 14.03P 상승한 1,465.41P로 지난해 5월 11일(1,464.70PP) 이후 9개월만에 사상 최고치 기록을 세우며 장을 마감하였다. 23일에는 전일 최고치 경신에 따른 지속 상승 기대감과 연 6일째 이어진 외국인 투자자의 매수 행진에 힘입어 전일대비 4.47P 상승한 1,469.88P로 연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 기록을 이어갔다. 26일에는 최근 단기 급등에 대한 부담과 매수 세력의 부재 속에 등락을 거듭하다가 전주말 대비 0.15P 소폭 상승한 1,470.03P로 사흘 연속 사상 최고치 기록을 경신하였다. 그러나, 27일에는 사상 최고

자·본·시·장·소·식

치 기록 행진에 대한 부담과 중국 위안화 절상 우려가 또 다시 대두되면서 전일대비 15.43P 하락한 1,454.60P로 나흘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2월의 증시를 마감하는 28일에는 전일 중국발 쇼크로 미국 증시를 비롯한 세계 증시가 큰 폭 하락 소식이 장 시작부터 무려 60P선 가까이 하락하였으나, 저가 반발매수 유입에 힘입어 낙폭을 줄이며 전일대비 무려 37.26P 큰 폭 하락한 1,417.34P로 2월의 증시를 마감하였다.

2월의 유가증권시장 주식거래량은 전월에 비해 2억 8,033만주가 증가한 43억 8,111만주이고, 거래대금도 10조 298억원이 증가한 63조 7,192억원을 기록하였다. 또한, 시가총액도 전월에 비해 27조 3,994억원이 증가한 696조 397억원을 나타내었다.

구 분	2007년 2월	2007년 1월	증 감
종합주가지수(월말)	1,417.34P	1,360.23P	57.03P
(월중 최고/최저)	1,470.03P / 1,355.79P (2/26) (2/1)	1,435.26P / 1,355.79P (1/2) (1/10)	3477P / 2711P
거래량	43억 811만주	4억 78만주	2억 8,033만주
거래대금	63조 7,192억원	53조 6,894억원	10조 298억원
시가총액	696조 397억원	668조 6,403억원	27조 3,994억원

□ 코스닥시장

2월의 코스닥시장은 주가지수가 월초 576.37P에서 출발하여, 전월대비 24.56P(4.26%) 상승한 600.93P로 2월의 장을 마감하였다.

이처럼 2월의 코스닥시장의 주가지수가 상승세를 나타낸 것은 미국 증시의 사상 최고치 경신 행진과 유가증권시장 코스피지수의 사상 최고치 경신 등에 따른 상승 기대심리 확산 등의 영향으로 위축되었던 투자심리가 호전된 때문으로 풀이 된다.

2월중 동향을 자세히 살펴보면, 월초인 2월 1일, 미국 증시의 강세와 유가증권시장 코스피지수의 큰 폭 상승에 따른 투자심리 회복으로 전일대비 6.09P 상승한 582.46P로 닷새만에 반등하면서 출발하였다. 2일에는 미국 증시가 또 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였다는 소식이 전해지는 가운데 기관 및 외국인 투자자의 동반 매수에 힘입어 전일대비

9.26P 큰 폭 상승한 591.72P로 지난 1월 18일(597.05P) 이후 11거래일만에 590P선을 회복하였다. 5일에는 외국인 투자자의 매수에 힘입어 강세로 출발하였으나, 단기 급등에 따른 경계 및 차익매물 출회로 오후 폭이 줄어들며 전주말 대비 2.89P 상승한 594.61P로 사흘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6일에는 단기 급등에 따른 기관 및 외국인 투자자의 경계 및 차익매물을 개인투자자가 꾸준히 소화하면서 전일대비 1.76P 상승한 596.37P로 나흘 연속 상승세를 나타내었다. 7일에도 호전된 투자심리를 바탕으로 전일대비 4.34P 상승한 600.56P로 닷새째 상승세를 이어가며 600P선을 지난 1월 16일(605.50P) 이후 20여 일만에 회복하였다. 8일에는 미국 증시의 상승과 추가 상승 기대심리 확산에 힘입어 전일대비 1.26P 상승한 601.82P로 엿새째 상승세를 보였다. 9일에는 기관투자자의 매도세와 외국인 투자자의 매수세의 치열한 공방전 끝에 매수 우위로 전일대비 0.07P 소폭 상승한 601.98P로 7일째 상승 행진을 이어갔다.

2월 12일, 지난 주말 국제유가 상승과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 부각에 따른 미국 증시의 하락 소식 등의 영향으로 전주말 대비 2.70P 하락한 599.19P로 600P선이 힘없이 무너졌다. 13일에는 NHN의 실적 호전 및 북핵 6자 회담타결 전망으로 상승, 출발하였으나 경계 및 차익매물이 쏟아지면서 전일대비 2.48P 하락한 596.71P로 연이틀 하락세를 보였다. 그러나, 14일에는 미국 증시의 큰 폭 상승에 따른 투자심리 회복으로 전일대비 6.07P 상승한 602.78P로 사흘만에 상승 전환하며 단숨에 600P선을 회복하였다. 15일에는 미국 증시를 비롯한 해외 증시의 상승 행진에 따른 투자심리 호전으로 5P 넘게 상승, 출발하였으나 장 후반 경계 및 차익매물 출회로 상승 폭이 줄어들며 전일대비 1.39P 소폭 상승한 604.17P로 이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16일에는 외국인 투자자 매수세와 기관투자자 매도세 간에 치열한 공방전 끝에 매수 우위로 전일대비 0.90P 소폭 상승하면서 사흘 연속 상승하였다. 20일에는 외국인 투자자 및 개인투자자의 동반 매수 유입에 힘입어 전주말 대비 2.41P 상승한 607.48P로 나흘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며 610P선에

자·본·시·장·소·식

한 발짝 다가섰다.

2월 21일, 일본 금리인상과 외국인 투자심리 불안으로 등락을 거듭하는 혼조세를 보이다가 오후 장 들어 향후 증시의 상승 기대감이 확산되면서 전일대비 0.68P 소폭 상승하였다. 22일에는 유가증권시장의 코스피지수가 장중 사상 최고치 기록을 경신하였다는 소식에 힘입어 전일대비 1.85P 상승한 610.01P로 작년 12월 20일(614.27P) 이후 2개월만에 610P선을 회복하였다. 23일에도 전일에 이어 상승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전일대비 0.42P 상승한 610.83P로 7일째 상승 행진을 나타내었다. 26일에는 외국인 투자자의 매수에 힘입어 전주말 대비 2.18P 상승한 613.01P로 8일째 상승하였다. 그러나, 27일에는 연일 상승에 따른 경계 및 차익매물로 전일대비 1.49P 소폭 하락한 611.52P로 9일만에 숨고르기 양상을 나타내었다. 2월의 증시를 마감하는 28일에는 미국 증시와 중국 증시의 급락 소식에 투자심리 급랭으로 무려 30P 가까이 하락, 출발하였으나 저가 반발매수 유입에 힘입어 낙폭을 크게 줄이며 전일대비 10.59P 하락한 600.93P로 600P선을 간신히 턱걸이 하면서 2월의 증시를 마감하였다.

2월의 코스닥시장 주식거래량은 전월에 비해 27억 4,102만주 감소한 113억 202만주이고, 거래대금도 4조 5,762억원 감소한 34조 3,574억원을 기록하였다. 반면, 시가총액은 전월에 비해 3조 5,497억원이 증가한 73조 456억원을 나타내었다.

구 분	2007년 2월		2007년 1월		증 감	
종합주가지수(월말)	600.93P		576.37P		24.56P	
(월중 최고/최저)	614.27P (2/22)	576.37P (2/1)	608.72P (1/2)	571.04P (1/23)	5.55P	5.33P
거래량	113억 202만주		140억 4,304만주		▲27억 4,102만주	
거래대금	34조 3,574억원		38조 9,336억원		▲4조 5,726억원	
시가총액	73조 456억원		69조 4,959억원		3조 5,497억원	

● 발 행 시 장 ●

1월중 유가증권 공모를 통한 기업의 자금조달 총액이 6조 6,009억원으로 전월 5조 5,263억원 대비 19.4% 증가

하였으며, 이중 주식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은 3조 9,943억원, 회사채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은 2조 6,066억원을 기록하였다.

주식발행은 전월 1조 2,321억원 대비 224.2% 증가하였는데, 이는 (주)신한금융지주회사의 대규모 증가(3조 7,500억원)로 인해 유상증자가 전월 1조 1,391억원 대비 247.7%(3조 9,603억원) 증가한데 주로 기인하였으며, 기업공개는 전월 930억원 대비 63.4% 감소한 340억원에 그쳤다.

회사채발행은 전월 4조 2,942억원 대비 39.3% 감소한 2조 6,066억원을 기록하였으며, 종류별로는 일반회사채발행이 30.5% 증가한 반면, 금융채와 자산유동화증권(ABS)는 각각 전월 8,700억원, 2조 1,007억원 대비 41.4% 및 82.4% 감소하였다.

일반회사채는 발행금액(1조 7,267억원)이 만기상환금액(7,545억원)에 비해 9,722억원만큼 더 발행되었으며, 금융채는 신용카드채의 발행규모 감소(전월대비 △39.1%)로 인해 전체적으로 41.4% 감소하였고, 자산유동화증권(ABS)는 전월 2조 1,007억원 대비 82.4% 감소한 3,699억원을 기록하였다.

※ 자금조달실적 - 133면 참조

주요 정책동향

□ 이종대표소송제 등 상법 개정 예정대로 추진 방침

정부가 그동안 재계와 갈등을 빚어왔던 이종대표소송제 등을 포함한 상법 개정을 예정대로 추진할 것임을 재확인했다.

법무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2007년 업무계획 및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이미 법무부 상법쟁점조정위원회는 이종대표소송제, 회사기회유용 금지, 집행임원제 등 그동안 논란을 빚었던 3대 쟁점 조항을 상법 개정안에 모두 포함시키기로 결론을 낸 바 있다.

재계는 이에 대해 이종대표소송제 도입에 따른 소송남발 사태를 크게 우려하고 있다.

자·본·시·장·소·식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요건을 당초 '모회사가 비상장 자회사 지분 50% 이상을 보유할 경우'에서 '실질 지배관계가 인정될 경우'라는 내용을 추가해 다소 강화했다고는 하지만 남소를 막는 데는 큰 도움이 안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기업법제팀을 구성하고 연구용역과 전문가 토론회를 거쳐 오는 6월부터 연말까지 단계적으로 개선방향을 확정, 법령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중대표소송제와 관련하여 무분별한 남소를 막기 위해 손해배상소송을 당한 기업이 그 소송을 당함으로써 입게 되는 손해의 배상을 반소로 직접 청구하고, 남소가 명백한 경우 기업이 부담한 변호사 보수 상당액을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는 등 일부가 보완된 것으로 알려졌다.

□ 증권선물거래소, 관리종목 등 시장감시 강화 방침

증권선물거래소는 12월 결산 상장회사들의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이 다가옴에 따라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가 우려되는 법인에 대한 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증권선물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 전·후에 주가조작 및 미공개정보 이용 등 각종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당해법인에 대한 시장감시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시장감시위원회는 예상되는 불공정거래 행위 유형으로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우려 법인의 주요 주주와 임직원 등 내부자가 손실회피를 위하여 미리 보유주식을 매각하는 '미공개 정보 이용', 결산관련 사업실적을 사실과 다르게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매수를 유인하는 '주가 조작' 등으로 보고, 특정 지점 또는 특정계좌에서 대량으로 매수·도 주문이 출회될 경우 미공개정보 이용 여부를 점검하고, 특정 종목의 주가 급등락 시 당해종목에 대하여도 증권회사 객장 및 인터넷 상의 정보수집을 강화하고 매매차익이 많은 계좌를 대상으로 주가조작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특정법인의 사업실적 및 감사의견과 관련한 언론

보도 또는 풍문이 있거나 발행주식의 시황이 급변할 경우 신속히 조회공시를 의뢰하고,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당해종목의 주가등락과 관계없이 즉시 매매심리에 착수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 계열회사 임직원도 내부자 규제 방침

앞으로는 계열회사의 주요주주 및 임직원들도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주식거래를 할 경우와 계약체결을 위해 교섭하는 과정에서 미공개정보를 이용하면 처벌을 받게 될 전망이다.

금융감독당국은 최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지능적인 내부자거래 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내부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규제대상 유가증권의 범위도 확대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해당법인의 임직원, 대리인 및 주요주주만 내부자로 정의하고 있으며, 해당법인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미공개정보 이용을 금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최근 전통적인 시세조종 행위가 점차 감소하는 반면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지능적인 불공정거래가 늘고 있어 내부자의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내부자거래는 2003년에는 전체 불공정거래의 12.6%에 그쳤으나, 2004년에는 16.2%, 2005년에는 21.3% 그리고 2006년에는 23.1%에 달해, 불과 3년 사이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관계자는 "계열사 임직원들도 본사의 대량 공급 계약 같은 정보를 취득하기가 용이하고, 또 이를 주식매매에 활용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어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처벌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당국은 이와 함께 관련 내부자거래 규제를 받는 유가증권의 범위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해당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으로 한정하고 있는 조항을 개정하여 주식워런트 증권(ELW) 등을 통해 시세 차익을 얻는 경우에도 처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 주식매수청구권 공시전 취득만 인정 방침

금융감독원은 기업의 인수·합병(M&A)을 원활하게 하

자·본·시·장·소·식

기 위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M&A 공시 이전에 취득한 주식에만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주주 확정일 이전까지 주식을 보유하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 고위관계자는 “주식매수청구권이 원래 취지와는 달리 주식매수 청구가격과 시가와의 차익을 얻는데만 주로 이용되어 기업의 인수비용이 높아져서 M&A 자체가 무산되는 경우도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 금융감독위원회 및 재정경제부와 협의를 통해 관련 법률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의 계획대로 주식매수청구권제도가 개선되면 현대건설·대우조선·대우인터내셔널 등 현재 M&A 시장에 매물로 나와 있는 회사들의 매각협상이 한층 원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감독원은 이와 함께 M&A 계획을 공시한 이후에 발생하는 가격변동을 매수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주식매수 청구가격의 산정기간을 변경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출자총액제한제도 적용기준 대폭 완화

출자총액제한제도 적용대상 기업을 자산총액 6조원 이상에서 10조원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원회회를 통과하였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적용완화를 주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전체회의에 상정하였다.

법안심사 소위원회는 우선 출자총액제한제도 적용대상을 자산규모 6조원 이상 그룹의 모든 소속회사에서 10조원 이상 그룹의 2조원 이상인 중핵기업으로 제한하기로 하였다. 출자총액제한제도 적용대상 기업의 출자한도는 순자산의 25%에서 40%로 상향 조정되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출자총액제한제도 적용대상은 현행 14개 그룹 343개 기업에서 6개 그룹 22개 회사로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따라서, 자산 2조원 이상의 중핵기

업이 아닌 321개사는 제한없이 출자할 수 있게 된다.

3월초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처리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출자총액제한제도 적용 기업집단 지정을 계획대로 4월 15일에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을 요건은 상장회사는 30%에서 20%로, 비상장회사는 50%에서 40%로 각각 완화되었으며, 지주회사 부채비율 요건은 현행 100%에서 200%로 상향 조정되었다. 그리고, 개정안은 이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의 금융거래 정보요구권을 오는 2010년까지 연장하였다.

▣ 외국지주회사 상장시 자회사도 공시 방침

조세회피지역 등에 설립된 외국기업의 역외지주회사가 국내에 상장하려면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사업내용 및 각종 재무정보에 대한 공시와 함께 역외지주회사의 지배구조와 법적 위험 등도 함께 공시하여야 한다.

금융감독당국 고위관계자는 “외국기업의 국내 상장이 구체화됨에 따라 관련 공시제도를 정비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역외지주회사가 주식을 국내에서 공모하거나 상장할 때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사업내용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계열사 ▲임직원 관련사항 등 비재무정보를 재무정보와 연결기준으로 작성토록 하고, 아울러 적용법규와 정관 등을 포함한 역외지주회사의 지배구조 개요를 국내 제도와 비교하여 기재토록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경감 검토 방침

공정거래위원회 권오승 위원장은 “기업에 대한 과징금 경감 방안과 관련하여 기준 자체를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어, 태스크포스를 구성하여 심도있는 검토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장은 올해 업무계획과 관련한 브리핑에서 “과징금은 부당이익 환수와 처벌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데 과징금을 반드시 많이 부과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갖고 있다”면서, 이 같이 설명하였다.

기업에 대한 제재와 관련해서 “위법행위에 대한 기준은

자·본·시·장·소·식

엄격하게 집행하되, 과징금 부과시를 개정하여 관련 매출액이나 위법행위의 기간 등을 더욱 세심하게 검토함으로써 과징금 부과 시스템을 좀 더 정밀하게 조정할 계획이며, 지금까지는 위법행위 기업에 대한 손배소 등이 활성화되지 못하여 부당이익 환수와 처벌이라는 성격이 과징금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법원의 판결 결과 과징금 규모가 삭감되는 경우가 많아 이를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배경을 설명하였다.

▣ 금융권 임원 자격 요건 보완 방침

앞으로는 금융기관 또는 유관기관에 근무한 경력이 없는 사람은 은행 임원이 될 수 없으며, 아울러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별도의 지원부서를 은행 내부에 설치하여야 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은행의 경영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상반기 중에 임원의 자격 요건을 보완하고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은행 임원의 자격과 관련해서는 은행법과 감독규정에는 금지산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금융감독당국의 문책 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은 지 일정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은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는 "현행 은행 임원의 자격은 소극적 요건을 적용하고 있어, 앞으로 여기에 금융기관이나 유관기관에 일정기간 근무하고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임원이 될 수 있도록 감독규정이나 은행 내규에 적극적인 요건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금융기관 또는 유관기관에 근무한 경력이 없는 사람은 은행 임원이 될 수 없다.

또 금융감독위원회는 현재 은행 사외이사의 독립성이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사외이사 후보 추천과 임명 과정에 대주주나 경영진의 영향력을 줄일 수 있도록 선임 절차를 개선하고, 사외이사가 업무 수행과정에서 비서실 등 은행장 직속부서의 지원을 받지 않고 독립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별도의 지원부서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감사위원회 설치와는 별도로 상근감사위원을 반드시 두도록 하여 경영진 감시기능을 제고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수익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은행에도 증권회사와 자산운용사처럼 투자자문업을 허용하고, 금융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투자 등 성장 잠재력의 강화 노력을 경영실태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 회계감사인 자격기준 갈등 양상

금융감독위원회가 회계감사인 지정제도 개선과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협조요청에 대해 불가입장을 밝혀, 오는 3월에 예정된 규제개혁위원회 상정이 사실상 어렵게 되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규제학회 용역결과 나온 52개 경쟁제한 규제개선 과제 중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포함되어 있는 '감사인 지정요건' 개선 필요성을 요청한데 대하여 '협의불가' 통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금융감독위원회의 불가입장에도 불구하고 규제개혁위원회 상정을 강행할 경우 양 기관간 공방이 격화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자산규모 8,000억원이 넘는 회사의 경우 소속 공인회계사수가 100인 이상, 설립 경과년수가 10년, 손해배상능력 50억원 이상 등을 충족하는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한국규제학회에서도 정확한 회계감사를 위해 규모별로 회계감사인을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 불가피하다는 측면을 인정하고 있지만, 새롭게 증권시장에 공개되는 상장법인에 대해 똑같은 감사인 지정요건을 적용하는 데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금융감독위원회는 지난 2002년 공정거래위원회에 감사인 지정제도의 경쟁제한성을 질의했을 당시 제도자체의 경쟁제한 측면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인정한 바 있으며, 시장 실패를 보완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는 존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본·시·장·소·식

▣ 금융회사 재무분석시스템 구축 방침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가 제출하는 각종 업무보고서를 다양하게 분석할 수 있는 종합재무분석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프로그램 개발, 시스템 시범운영 등을 거쳐 오는 2010년 이후 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종합재무분석시스템은 업무보고서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전산언어를 기존 확장성표기언어(XML)에서 확장형 재무보고전용언어(XBRL)로 전환한 것이다.

인공지능형 전산언어인 XBRL이 업무보고서 시스템에 도입되면 금융회사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자료를 이용해 보고서를 자동으로 작성할 수 있어 업무부담이 줄어들고, 금융감독원도 각종 정보를 활용하여 원하는 형태로 다양한 분석모형을 만들 수 있어 금융회사의 재무상황을 심층적·입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종합재무분석시스템 구축이 가능해진다.

금융감독원은 종합재무분석시스템이 구축되면 금융회사에 대한 관례적인 종합검사를 축소하는 대신 이상 징후가 있거나 취약부분에 대한 증거수집·사실 확인 위주의 현장검사가 활성화되어 장기적으로는 금융감독업무의 패러다임도 크게 바뀔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올해 중 전자공시시스템에도 XBRL을 도입하여 다양하고 정교한 분석적발모형을 개발하여 기업의 회계분식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 금융회사 해외 진출 적극 지원 방침

윤중현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은 “우리나라 금융회사들의 활동영역이 전 세계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적 걸림돌을 제거해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당국은 금융권의 해외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계기관들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태스크포스에서는 ▲제도적·관행적 장애요인 개선 ▲해외점포 현지화 유도 및 지원 ▲금융감독원 해외사무소

를 정보센터로 활용하는 등 해외정보 네트워크 구축 ▲해외 감독기관과 교류·협력 확대를 통한 금융외교 강화 등 4개 핵심과제를 추진키로 했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위원장은 “금융산업이 글로벌 마켓으로 활발하게 진출하기 위해서는 자본 확충이 필요하며, 산업자본의 잉여자금이 금융산업의 자본확충에 쓰이고, 인수·합병 과정에서 국내의 자본의 역차별이 일어나지 않도록 금산분리 원칙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그러나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일방적으로 지배할 위험이 있으므로 그 부분은 감독역량 확보와 제도의 지속적인 보완을 통해 경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펀드 판매 실명제 도입 추진

이르면 올 상반기 중 펀드 판매 실명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금융감독당국은 “금융회사가 해외투자 펀드 등의 상품을 판매할 때 판매담당 직원의 이름과 연락처 등을 투자설명서에 기재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위원회 고위관계자는 “해외펀드 투자가 단기에 급증하고, 특정지역으로 자금이 집중되면서 해외펀드 부문에서 잠재적 위험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펀드 판매 실명제 등을 통해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감독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펀드 판매 실명제 도입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사람이 책임감을 갖고 과장된 설명을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감독당국은 펀드 판매 실명제 외에도 일일 해외펀드 판매 동향, 지역별 투자 동향 등도 점검하기로 했다. 또 일정지역에 60% 이상을 투자하는 상품만 해당 지역을 판 명칭을 사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해외펀드 설정 규모는 2005년 말 13조 4,000억원, 지난해 말에는 32조 2,000억원으로 급증했으며, 지난 1월 한달 동안에도 국내 자산운용사가 설정한 해외투자펀드에 만 3조원의 자금이 몰렸다.

▣ 금융회사 부득이 타사 주식 취득시 사후승인 허용 방침

자·본·시·장·소·식

금융기관이 다른 주주의 감자 등 부득이한 사유로 타사의 주식을 일정 한도 이상 소유하게 될 경우 사후 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이런 내용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하고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달 27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의 주식을 일정 한도 이상 소유하는 경우 승인이 허용되는 부득이한 사유를 구체화하였다. 여기에서 말하는 일정한도는 다른 회사 주식을 5% 이상 소유하면서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종전까지는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의 주식을 일정 한도 이상 소유할 때는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했지만, 개정 시행령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사후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사후 승인이 허용되는 부득이한 사유로는 ▲다른 주주가 감자를 할 경우 ▲담보권의 실행 또는 대물변제의 수령에 의해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긴급하게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경우 등이다.

이에 따라 다른 주주의 감자나 대출금을 주식으로 상환받아 지분율이 증가한 경우나 지분참여 등을 통한 민간사회간접자본(SOC) 사업투자 시한이 촉박하여 사전 승인없이 다른 회사의 주식을 일정 한도 이상 소유하게 될 경우에는 사후 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에는 또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일정 한도 이상 소유하게 된 금융기관은 한도 이상 소유한 이후 처음 소집되는 다른 회사의 주주총회일까지 사후 승인을 신청하도록 했고, 아울러 금융감독위원회는 주식 취득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 그 이유를 승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승인을 얻어 다른 회사의 주식을 초과 소유하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매년 정기적으로 초과 소유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하고, 해당 금융기관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자료를 다른 회사의 정기주주총회일로부

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이와 함께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기관의 합병·전환을 인가할 때 출자 능력과 재무상태를 심사하는 주요 출자자의 범위를 최대주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주주, 10% 이상 주식 소유 주주 및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 등으로 정했다.

▣ 일반펀드 후순위채권 투자 허용 방침

금융감독원은 자산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펀드의 후순위채권 투자를 허용하고 펀드 대형화를 위한 규제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우선 펀드의 후순위채권 투자제한과 관련하여 고수익구조 위험펀드에 후순위채권 투자를 허용하고, 일반펀드에도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등급 이상의 신용등급을 받은 후순위채권 투자를 허용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그동안 펀드의 후순위채권에 대한 투자가 엄격히 제한됨에 따라 다양한 자산에 대한 투자 등 효율적 자산운용에 제약요인이 있었으나, 이번 규제 완화로 펀드 수익률 제고 및 투자기법 선진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동안 후순위채권에 대한 투자는 후순위채권 전용펀드에서만 가능했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펀드 대형화와 관련해 규제를 더욱 강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은 국내 펀드 수탁고에 비해 펀드수가 지나치게 많고, 펀드당 규모도 작아 펀드 운용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투자자의 재산보호에 소홀한 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국내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8,239개 펀드의 평균수탁고는 295억원이며, 1,000억원 미만 펀드는 4,588개(55.7%), 10억원 미만 펀드도 1,510개에 달하는 등 펀드 대형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분산투자가 어렵고 펀드 관리비용 상승의 원인이 되는 소규모 펀드수를 대대적으로 축소해 펀드를 대형화함으로써 간접투자자의 재산보호를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